‘학력 위조·北에 5억달러 제공 서명’ 공방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통합당 의원들과 설전

“단국대 성실히 수강해 졸업…北 현금 지원 합의문 사실 아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단속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 남북 합의서에서 당시 남측 특사였던 자신이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에 서명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속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단속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2016년 3월 양승태 대법원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당시 대법원 판결을 거론했다.

또 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당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박 후보자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자는 “문건 어디에 5억 달러가 들어가 있느냐”며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합의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합의서)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선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남북 경협과 북한의 핵개발간 상관관계를 놓고 주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느냐’는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저는 지금도 개성공단이 합의된 대로 2천만평이 개발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숙사를 지어줬다면 큰 경제발전을 이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북한이 그 돈을 핵개발에 쓰면 더 큰 문제이고 핵 개발에 안 썼다고 해도 핵 개발 자금을 당겨오는 기회비용으로 쓰인다”는 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자 박 후보자는 “교수님이 잘못 생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이 북한 핵 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 아니냐”는 주 원내대표의 말에 박 후보자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핵개발과 남북 경협간 관계도) 이치상으로 그런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이치를 갖고 저한테 강요하지 말라”면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학교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학적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학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 저는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하 의원이 대학에 가서 요구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미애 “檢 권한 막강…민주적 통제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데 이어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수사 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통합당, 종전선언 촉구안 동참해달라”

민주·정의당 의원 174명 결의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은 27일 국회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에 미래통합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 174명은 지난달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공식 종료하고 평화협정 체제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면서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가 미래세대에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및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절박한 인선”이라며 “통합당은 꺼내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인사청문회 임해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통합당, 수도 이전 대응 ‘진퇴양난’

겉으론 “국면 전환” 비판…충청권 표심 외면 못해 갈등

미래통합당이 여권발(發)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내 일부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찬성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2022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여권이 선점한 행정수도 이전론에 무작정 올라탈 수도, 지역 표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불편한 상황이라는 게 27일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여권의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서울 대 비서울, 야당을 충청권 대 비충청권으로 편 갈라 재미 보겠다는 수작”이라며 “당내 충청권에서도 소수를 제외하면 여당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 완화를 꼽은 점을 공격한 것이다.

실제로 충청권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과 ‘세종시 설계자’로 불리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수도 이전 문제를 공개 거론하며 당 지도부와 결을 달리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내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충청권 3선인 김태흠 의원은 “수도 이전은 백년대계로 논의해야 한다”며 “당이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꼼수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쇠뿔도 단김에 … 與 ‘행정수도 완성’ 속도전

추진단 출범…특별법에 개헌·국민투표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한지 1주일 만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별법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면서 최상의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내 ‘행정수도 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여론수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여야 합의를 통한 신행정수도특별법, 개헌, 국민투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TF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간사인 이해식 의원 등 전문성과 지역을 고려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1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며 “여야 합의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므로 합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TF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제안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 과제를 정할 예정이다. ‘세종 행정수도, 서울 경제수도’가 기본적인 밑그림이다.

관건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당내 다양한 추진 방식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일단 이해찬 대표가 거론한 개헌 불가피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한 방송사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궁극적인 방식은 개헌”이라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미 전날 동조했다.

다만 개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가 밀고 있기도 하다.

송갑석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년 전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개헌의 요구가 행정수도뿐 아니라 권력구조까지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논의됐기 때문”이라며 “개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 매 물 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